

어촌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와 이행실적 점검방식의 개선방안

김정태
한국농어촌공사

Rural Standard Services Condition in Rural Fishing Area and The Improvement of Checking Methods for Implementation performance

Kim Jungta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living environment in rural fishing area and to suggest checking methods for implementation performance. Rural service standard is the key factor of rural development in Korea. In 2012, The first Implementations of performance was announced. The results were presented to the unit by the City and the County. Because of Fishing villages exists as a unit by the haengjeongri, It is difficult to know the status of the fishing villages by the Rural service standard. In order to look for the actual conditions in rural fishing village it was investigated in the 100 Eochongye.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is 577 questionnaires. Analysis showed that rural fishing areas were superior to general state of rural in the 8 items of rural service standard. Especially housing, transportation and health care sector in rural fishing area was better than general state of rural. But Public safety and order is relatively poor. This is because Fishing village contains islands. Presenting to improve rural service standard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e items of rural service standard should be measured the actual residents' accessibility than opportunity of the public service. and after setting the rural service standard clear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each sector, Accessibility aspects of the customer for the public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Checking the performance for the unit by the City and the County should be replaced as a living zone in order to consider the facilities using nearby.

Key words : Rural Service Standard, Rural Fishing Area, Living Zone, Eochongye

1.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009년 12월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1개 부처 공동으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처별 협력을 통해 2014년까지 추진과제와 목표를 구체화시킨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하였다. 2012년 2월 공표통계, 각 부처 내부자료, 지

자체 행정조사 자료 등 50개를 활용하여 시·군단위로 이행실적을 처음 발표하였는데, 시·군 단위로 이행실적이 점검되어 시·군에 속한 읍·면·리 수준을 살펴보는 데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 농정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인과 거주자인 어촌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어업인은 2011년 현재 약 15만 9천명에 불과하나(통계청 나라지표), 이들에 의해 생산된 어패류는 국민1일 동물성식품 섭취량의 약 41.8%를 차지하고(농촌경제연구원, 2010), 1인당 연간소비량은 49.8kg으로 자급률은 83% 이내(통계청, 2010),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품공급 기지로서 어촌의 역할은 중요하다. 어촌분포는 약 41.1%가 100가구 미만으로, 어업인은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읍·면 인구의 약 11.9% 정도인 행정리 규모이

Corresponding author : Kim, Jungtae
Tel : 031-420-3448
E-mail : kimjungtae@paran.com.

나(민홍기, 2009),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업인의 생활근거지인 동시에 국토관리측면에서 전국연안과 해안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1차 어촌종합개발사업(1994-2008)에 5,545 억원이 투입되었고, 2013년까지 3,25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이승우 등, 2009), 정부재정 활용측면에서도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리 규모로 존재하는 어촌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는 파악할 수 없어, 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의 기초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제시하면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본 어촌의 생활실태를 2012년 발표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적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어촌주민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항목은 무엇인가를 밝히며,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적 측정기준을 살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적 점검방식의 개선방안 제시이다. 본 연구는 어촌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어촌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환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농어촌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주민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부차원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공적영역이 제공해야 할 최소서비스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농어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영역 차원의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이성근·이관률(2006), 박대식 등(2006) 등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도농격차 해소와 농촌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종류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공공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는 다소 모호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표별 정부부처가 수행할 영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며, 매년 이행실적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갖는다. 유사한 해외정책은 영국에서 2000년 농촌백서가 출간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농촌주민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

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킨 것이다(Countryside Agency, 2002: 3). 영국 농촌비전을 삶과 직업의 공간, 보호되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설정하면서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직업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농촌경제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통합을 유도하면서 가정과 마을, 소도읍(Market Town)으로 연결되는 공공영역의 유기적인 서비스공급체계를 강조하면서(DETRFH, 2000: 5), 공적영역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14개 부문 26개 서비스로 설정하고 각 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부처를 지정하였다(DEFRA, 2002: 6-12). 이러한 서비스기준은 매년 이행보고서를 통해 부처 간 실적을 점검하면서, 농촌정주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통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연구는 송미령·김광선(2009), 송미령 등(2009)에 의해 시도되었고, 송미령 등(2009)에서는 서비스기준항목을 8개 부문 37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으나, 다수 항목이 2가지 이상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실제로는 43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김광선 등, 2012: 7), 개별 항목별 2014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목표치가 제시되었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한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정부의 통합적 정책활용을 바탕으로 농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행실적점검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어촌지역개발관련 연구

어촌을 중심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한 연구는 이승우·박상우(2010)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어촌주민 358명을 대상으로 도서어촌을 중심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해 수행되었다. 전국 어촌 중 도서어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30.9%인데 표본의 약 51.2%를 할당하였고, 어촌의 62.6%에 달하는 1,239개 연안어촌 중 37개만이 조사되어 표본상의 문제가 있다. 특히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어업인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어촌의 명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2011년 어가소득은 38,623천원(농가경제통계, 2012)으로 농가소득대비 128%로 높아, 주거, 정보통신 등과 같은 개별서비스항목이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촌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어촌주민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를 살

펴보면, 최성애 등(2007)은 어촌계가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 사회안전망 등 5개 부문이 도시보다 열악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1,009개 표본어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어촌지역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외 어촌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정리한 것은 Table 1과 같은데, 주된 연구흐름은 어촌관광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어촌생활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어촌은 농업인이 혼재되어 있고, 통상 농촌의 일부로 간주되어 농촌관련 연구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어 어촌에 초점을 둔 연구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어촌관광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어촌관광이 어촌공동체문화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어항 등 생산기반시설 활용방안,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어촌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어촌사회에 형성된 어촌계가 총유개념으로 관리하는 공동어장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방안(김준, 2006, 권삼문 2000)과 마을어장의 체험관광 상품이용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갈등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이창언, 2002). 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전략은 소규모 어항 등이 어촌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성을 지닌 공간적 매력이 작용한 결과이나 1994년부터 시작된 어선감척사업으로 소규모어항의 유희화에 따른 새로운 활용방안의 마련도 고려되었다. 어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보이는 연구경향은 농촌관광 관련연구와 비슷한 연구경향을 갖고 있으며, 주로 어촌관광 방문동기, 프로그램개발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다.

II. 조사 및 분석방법

1. 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

조사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8개 부문 3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정부이행실적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가부(可否)만으로 조사하고, 부문별 생활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지 선정은 국내 어촌계 100곳을 집단 간 고정표본수로 할당 한 후, 집단 내 비례할당 추출을 진행하는 고정표본 추출계획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59개 시·군별 최소 1개씩의 어촌계가 포함되도록 조사대상지역을 고정추출 한 후, 잔여표본은 시·군별 어촌계수를 고려하여 비례 추출로 최종표본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표본에 포함된 어촌계별 어촌계원과 비어촌계원 각 3명씩 어촌지역별로 총 6명씩 조사하였는데, 어촌은 어업인과 농업 등의 어업외 활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어업인의 소득수준이 높아 생활환경 등의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어촌지역 주민 전체를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5일 - 10월 15일로 11일간 수행되었고, 설문조사자는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거쳐, 설문대상자에게 설문문항별 내용을 설명한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종분석은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577부를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어촌지역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와 농어촌전체 수준과 비교를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는 2012년 2월 8

Table 1 어촌개발관련 주요연구

부문	연구자	주요내용	
생활환경	최성애 등(2009)	어촌지역 내 사회구조 및 어촌유형별 발전방안 제시	
	안영화 등(1997)	추라도 어촌종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 제시	
어촌관광	어촌문화	김준(2006)	어촌 생활문화 자원활용을 통한 관광어촌개발방향
		이창언(2002)	어촌관광사업 추진으로 인한 공동체적 관계의 해체
		권삼문(2000)	民有 개념을 바탕으로 한 어촌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개발방향
	생산기반	이재형(2006)	소규모 어항의 활용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김대식·이춘우(2005)	어촌어항개발 정책과 개발방향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 인식차이
		박구원·이수옥(2002)	어촌기반시설 및 기능유지를 통한 어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활성화	신동주(2011)	어촌관광 방문동기와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분석
		장양례 등(2011)	어촌관광 만족도와 체험관광 상품 및 추진의도 관계
		곽행구 등(2008)	생태관광객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통해 본 프로그램개발
		임영규 등(2004)	국내 어촌관광의 실태를 통한 개선방향의 제시
김성귀 등(2001)	국내 어촌관광 형태의 유형구분과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유승동 등(1999)	어촌관광지 방문객의 관광동기와 재방문의사 관계		
유기준(1998)	어촌지역 관광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실천사항 제시		

Table 2 표본에 포함된 대상지역 및 설문부수

지역	해당 시·군	어촌계수	설문부수
부산광역시	부산, 기장	3	18
인천광역시	인천, 강화, 옹진	3	18
울산광역시	울산, 울주	3	18
경기도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7	42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8	48
충청남도	당진, 서산, 태안, 보령, 홍성, 서천	10	60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고창	6	36
전라남도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신안, 영암, 진도, 해남, 강진, 완도, 장흥, 보성, 고흥, 순천, 광양, 여수	31	186
경상북도	영덕, 울진, 포항, 경주	8	48
경상남도	하동, 남해, 사천, 창원, 마산, 진해, 고성, 통영, 거제	15	90
제주도	제주, 서귀포	6	36
전체	59개 시·군	100	600

일 전국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점검결과를 이용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전국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정부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각 부문별 설정된 기준항목별 목표치는 100%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발표된 이행실적 결과는 1단계 추진기간(2010-2014년)에 설정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 따라서 2012년 발표된 이행실적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달성률 = $\frac{\text{목표대비달성률} \times \text{정부목표치}}{100}$ ’,

각 서비스기준 달성률을 100%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140개 시·군 중 어촌을 포함한 곳으로, 2012년 발표된 이행실적 결과는 이들 시·군의 평균치로서 어촌과 농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과 농촌의 평균치로 제시된 결과에서 어촌을 분리할 경우 농촌의 실태로 볼 수 있는데, 발표된 결과에서 어촌과 농촌을 분리하는 것은 사용된 통계자료 등 시·군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촌 실태를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로 대체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농림수

산식품부가 발표한 140개 시·군에 조사지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 부산, 울산과 같은 대도시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조사설문 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일반화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설문분석방법은 설문응답자 개인적 배경과 농어촌서비스 기준항목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농어촌서비스 기준항목과 주민만족도와의 관련성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설문응답자 개인적 배경

설문응답자 대부분은 남성(86.8%)이다. 조사대상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촌계장 및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대다수 남성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직업분포는 어업이 248명(43.0%), 농업 78명(13.5%)로 어업보다 많았으나, 겸업(어업+농업) 비중이 176명(30.5%)로 어촌에서도 겸업을 포함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Table 3 설문응답자 개인적 배경

성별		직업		연령대		거주기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남성 501명	86.8	어업 248명	43.0	30 이하 6명	1.0	≤ 10년 45명	7.8
여성 73명	12.7	겸업* 176명	30.5	31-40살 40명	6.9	11-20년 59명	10.2
무응답 3명	0.5	농업 78명	13.5	41-50살 166명	28.8	21-30년 71명	12.3
		기타 67명	11.6	51-60살 218명	37.8	31-40년 60명	10.4
		무응답 8명	1.4	61-70살 112명	19.4	41-50년 105명	18.2
				71살 이상 24명	4.2	51-60년 132명	22.9
				무응답 1명	1.9	61년 ≥ 85명	14.8
						무응답 20명	3.5

* 겸업은 농업과 어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비중은 43.5%로 어업인보다 많아, 농업은 어촌의 배후산업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령대는 50대가 218명(37.8%), 40대 166명(28.8%), 60대 이상(19.5%)의 순으로 노령화 상태가 높으며, 거주기간은 51-60년이 132명(22.9%), 41-50년 105명(18.2%) 순으로 설문응답자 대부분이 해당 어촌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높았다.

2. 어촌주민에 의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와 선호하는 지역개발부문

가. 어촌주민에 의한 농어촌서비스 기준평가

(이하 본문에서 ‘농어촌전체수준’은 2012년 2.8일 발표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적 결과를 p.5의 식을 이용하여 환산한 수준을 의미한다.)

1) 종합수준

Table-4는 조사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정부목표치를 제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조사시점은 2010년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적 점검지표는 2011년에 확

정되어 조사항목이 약간 상이하나,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이행실적 지표항목이 통합되고 축약되어 있어, 정부에서 제시한 달성율은 항목에 맞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부문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상태는 보건의료 75.4% > 주거 74.9% > 정보통신 72.9% > 교통 67.7% > 교육 57.1% > 사회복지 55.8% > 응급치안 52.3% > 문화여가 39.6% 순으로 분석되어, 주거와 교통과 같은 공간측면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와 문화여가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부족하다.

2) 주거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주거부문은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가구 구성원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성능기준 등이 모두 포함되나 대다수 어촌이 과소화 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와 달리 가구원별 최소면적에 대한 의미가 약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샤워시설 구비는 90% 이상으로 분석되어 기능면에서 볼 때 어촌지역에 분포하는 주택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자녀별 각방보유정

Table 4 어촌지역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와 정부목표

부문	항 목	조사 결과 (%)	‘11년 이행 실적	부문	항목	조사 결과 (%)	‘11년 이행 실적
주거 3.34	입식부엌 이용	97.0	84.4	보건의료 2.80	사·군 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운영	83.3	75.0
	수세식 화장실 이용	92.6			월1회 보건소 등 전문인력 순회방문 서비스	55.8	0.2
	샤워시설 구비	93.7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가능	87.1	99.6
	자녀별 각방보유	78.1			보건의료 부문 평균	75.4	58.3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	15.5	36.3	사회복지 3.34	주1회 이상 재가서비스 공급(필요 시)	51.8	27.3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56.3	81.2		청소년 센터접근성(자동차 이용 30분 내)	56.6	89.3
	상수도 시설설치	86.1	51.5		초등학교 돌봄시설(자동차 이용 20분 내)	56.1	97.9
	하수도 시설설치	79.6	73.2		영유아 보육시설(자동차 이용 20분 내)	65.8	69.9
주거부문 평균		74.9	65.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자동차 이용 30분 내)	48.5	78.6
교통 3.25	노선버스(도보 15분 거리 내)	83.2	82.4	응급치안 3.24	사회복지 부문 평균	55.8	72.6
	순환버스(도보 15분 거리 내)	58.7			구급차 30분 내 도착 및 응급처치	77.5	99.8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운행	80.6			화재 시 5분 내 소방차 도착	44.8	51.4
	인도와 차도 구분	48.3			112신고 시 5분 내 현장도착	50.8	100.0
교통부문 평균		67.7	50.6		응급치안 부문 평균	52.3	65.55
교육 3.28	학교규모 적정성(학생 수 고려)	68.0	6.7	문화여가 2.87	읍면 내 에서 열람·대출 가능	68.4	52.2
	학교에 의한 통학수단 제공	62.5	-		문화시설 접근성(자동차 이용 30분 내)	52.2	98.6
	사·군 내 우수고등학교 보유	67.3	85.7		월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26.0	46.1
	특기적성 등 방화 후 학교운영	50.2	72.4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존재	31.1	-
	주민참여의 교육발전위원회운영	46.0	59.3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존재(월2회 이상)	20.1	13.7
	읍면 내 평생교육 제공시설 보유	48.4	18.9		문화여가 부문 평균		39.6
교육부문 평균		57.1	78.6				
정보통신 3.28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시설 설치	80.1	67.9	종합수준			
	IPTV(디지털방송, HD방송)방식의 TV시청	65.6	61.5				
	정보통신 부문 평균	72.9	64.7				

* 부문 밑에 제시된 결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된 부문별 만족수준임.

도는 78.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12년 이행실적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전체 주거기준 수준은 84.2%로 어촌의 90.4%보다 낮아 어촌의 주거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시설, 면적, 침실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지표 간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 외 다른 항목에 대한 어촌지역 실태를 우선 보면, 상수도 시설설치와 하수도 시설설치는 각 86.1%, 79.6%로 정부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2년 이행실적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전체 수준은 각 51.1%, 73.2%로 나타나 정주환경 기반시설은 어촌이 농촌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어촌은 농촌과 달리 소규모 어항 등을 중심으로 마을형태가 비교적 집중화된 형태로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어촌은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이 15.5%로 정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은 56.3%에 불과한 반면, 농어촌전체수준은 도시가스 36.3%, 마을운영비 지원 81.2%로 어촌이 농촌보다 열악한 수준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어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교통부문

도보 15분 거리 내 노선버스와 순환버스가 각 3회 이상 운영되는 정도는 어촌지역에서 각 83.2%, 58.7%로 분석되었는데, 농어촌 전체수준은 노선버스와 순환버스를 모두 대중교통으로 간주하여 82.4%의 달성률을 제시하고 있다. 노선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어촌지역 교통여건이 다소 양호하다. 또한 어촌지역의 인도와 차도구분은 48.3%이나, 농어촌전체 수준이 18.9%에 불과하여 어촌이 농촌보다 높은 수준의 보행자 안전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교육부문

어촌주민이 평가한 학교규모 적정성은 약 68%이나, 농어촌전체수준은 6.7%로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전자는 주민에 의한 평가방식을 이용하고, 후자는 적정규모 측정이 어려워 소규모학교 통합률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학교규모에 대한 적정성평가의 기초는 주민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일정부분 주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군 내 우수고등학교 보유는 약 67.3%로 인데 반해, 정부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농어촌우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군에 위치하는 가를 중심으로 살펴 85.7%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어, 어촌주민과 우수고등학교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방과 후 학교운영은 50.2%,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46%, 평생교육시설 운영

48.4%인데 반해, 농어촌 전체수준은 각 72.4%, 59.3%, 18.9%로 제시되어 어촌 내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농어촌 전체보다 양호하나, 그 외 부분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부문에 대한 어촌주민과 정부의 시각차는 분석에 사용한 개별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의 상이함에 근본적 원인이 있을 것이나, 학교규모 적정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 평가대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방과 후 학교운영,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과 같이 실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운영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일 수도 있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운영뿐 아니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중요할 것이다.

5)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부문 중 인터넷이용은 80.1%, IPTV 방식의 TV시청은 65.6%로 분석되었는데, 농어촌전체로 보면, 초고속 인터넷 가입율 67.9%, IPTV를 볼 수 있는 광대역 통합법 가입율은 61.5%로 어촌지역이 농어촌전체보다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자상거래, 농어촌민박 예약 등 인터넷 이용 등의 정보통신 환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촌전체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보건의료부문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실태는 어촌이 83.2%, 마을 별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 순회방문은 55.8%,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가능은 87.1%로 분석되었다. 농어촌 전체수준은 각 75.0%, 0.2%, 99.6%이나, 이중 농어촌전체수준의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의약품 구입가능 항목의 세부기준으로 읍·면 내에서 의약품 구입가능만으로 제시한 결과로 세부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의약품 구입가능 항목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어촌이 농어촌보다 보건의료 부문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마을 별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 순회방문이 농촌보다 높은 이유는 조사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도서지역, 연륙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7) 사회복지부문

어촌주민에게 필요시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공급실태는 51.8%로 분석되었으나, 농어촌전체는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27.3%로 분석되어 어촌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촌은 자동차를 이용한 접근성 측면에서 청소년센터 30분내 56.6%, 초등학교 돌봄 시설

20분내 도착 56.1%, 영유아 보육시설 20분내 도착 65.8%, 다문화 센터 30분내 도착 48.5%로 분석된 반면 농어촌전체는 각 89.3%, 97.9%, 69.9%, 78.6%로 제시되어 어촌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청소년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 내 유무, 초등학교 돌봄 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은 읍·면 내 유무로 측정된 결과로 단순비교가 어렵다. 시설존재 유무로 판단하는 경우 도로상황, 도로접근성 등의 측면에 따른 시간거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8) 응급치안부문

어촌에서 구급차의 30분내 도착과 응급처치는 77.5%가 가능한 반면, 농어촌 전체는 99.8%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5분 내 소방차 도착여부는 어촌이 44.8%, 농어촌 전체는 51.4%로 분석되어 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표본에 도서 등이 포함된 결과이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는 어촌에서 36.2%인데 반해 전국평균은 11%로 분석되어 어촌이 우수하였으며, 112 신고 시 도착시간은 어촌이 50.8%, 전국평균 100%로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5분으로 설정한 반면,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은 10분으로 설정하여 지표가 상이하다.

9) 문화여가부문

어촌 내 읍·면에서 도서연람 가능여부는 68.4%로, 전국평균 52.2%보다 우수하였다. 자동차를 이용한 문화시설 접근성은 어촌이 52.2%인데 반해, 농어촌 전체는 98.6%로 분석되었고, 월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은 어촌이 26.0%인데 반해 전국평균은 46.1%로 분석되었다. 월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는 어촌이 20.1%, 전국평균은 13.7%로 분석되어 결과가 어촌이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서비스의 세부기준으로 문화시설 접근성은 시군 내 문화시설이 있는가의 여부로,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관람여부는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한 공

연 횟수와 전시일수로 분석되어 조사항목에 대한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농어촌전체 수준은 공급적 측면에서 주민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여부로 측정된 반면, 어촌은 주민이 직접 경험하고 체감한 것을 바탕으로 조사된 차이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회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실제 이용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기획된 문화공연과 이들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 운송수단의 제공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어촌주민이 평가한 부문별 개발우선순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가장 시급하게 접근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어촌주민은 1순위로 주거환경개선 52.8%, 사회복지 11.6%, 교통 10.6%의 순으로 분석되어, 주거환경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본 어촌지역 생활환경에서 보건의료 75.4%, 주거 74.9%, 교통 67.7%이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무엇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이 객관적 상태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항목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것과 상이한 정책적 방향을 양산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TV, 정보매체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을 기대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역점을 둔 사업내용이 현장주민 의견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농어촌 현장에서 샤워실, 수세식화장실 등 주택개량과 관련된 부분의 상당부분이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능중심이 아닌 질적 측면 측정을 위한 방향에서 주민평가를 부분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여가 등의 여가생활 및 개인개발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요구가 작다는 점은 이 부문에 관심을 돌릴 만큼 어촌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지 않은 결과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부문에 대한 누러본 경험이 부족하여 실제 생활에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영향일 수도 있다.

Table 5 어촌주민이 선호하는 지역개발우선순위

시급정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1위	주거환경	52.8	보건의료	22.5	보건의료	20.6	문화여가	27.7
2위	사회복지	11.6	사회복지	22.3	사회복지	19.4	사회복지	14.3
3위	교통	10.6	교통	15.7	문화여가	16.1	보건의료	12.3
4위	교육	8.4	교육	14.3	교육	15.2	교육	9.4

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부문별 생활만족도 관련성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으로 파악된 부문별 어촌지역 생활환경과 각 부문별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거,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의료, 문화여가 부문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이 분석되었으나, 교통, 정보통신 부문은 회귀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교통과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주민생활만족 수준은 그 외 다른 요인이 존재, 혹은 어촌 주민이 필요한 만큼 이상이 공급되거나,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요소일 수 있다. 가령 교통의 경우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을 수 있고, 인터넷 및 IPTV와 같은 정보통신 요인은 어촌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된 부문 중 주거부문은 자녀별 각방 보유여부($\beta=0.758$), 샤워시설 구비여부($\beta=0.468$) 2개 변인만이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 두 변인은 주거부문 만족수준의 약 75%를 설명하며, 각 유의수준 1%,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어촌에서 자녀별 각방보유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대비 78.1%로 최소주거기준에서 볼 때 주택과 관련한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지지되며, 샤워시설설치는 약 93.7%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기준 충족률을 보이나, 어촌지역에서 주택개량 소규모적으로 고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 샤워시설 기능은 있으나, 샤워·목욕 등을 위한 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문은 학교에 의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beta=0.620$)과 학교규모 적정성($\beta=-0.520$)이 교육부문 만족수준의 약 66.9%를 설명하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고 있었다. 농어촌지역의 과소화와 학생수부족으로 인한 폐교 등이 빈번히 이루어져 통학수단의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규모 적정성은 t 값이 -2.976으로 분석되어 학교규모가 클수록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앞서 제기한 것과 같이 학생 수 감소, 폐교 발생 등의 일련의 상황으로 어촌지역 내 학생 수가 작아져 기존 학교규모가 학생 수 대비 적정규모 보다 커진 것으로 결과적으로 어촌 과소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부문은 월1회 보건소 등 전문인력 순회방문 서비스($\beta=0.685$)와 시·군 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운영($\beta=0.414$)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수준이 상승되는 것으로 보여,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부문은 주1회 이상 재가서비스 공급($\beta=0.700$), 응급의료는 소방차 5분 이내 도착($\beta=0.754$), 문화여가는 읍·면 내 대출($\beta=0.613$)로 각 부문에 속한 항목 중 1개씩만이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문화여가 부문은 문화관람의 제공여부보다 읍·면 내 도서대출 가능여부가 중요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지원방향이 강화되고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6 농어촌서비스기준항목과 부문별 만족도 회귀분석결과

부문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F	Sig	비표준화			t	유의수준			
						B	표준오차	BETA					
주거	.895	.801	.751	16.094	.002	상수	-123.095	34.634		-3.554	.007		
						자녀별 각방	.919	.191	.758			4.803	.001
						샤워시설구비	.988	.333	.468			2.966	.018
교육	.854	.729	.669	12.135	.003	상수	25.570	24.856		1.029	.330		
						통학수단제공	.954	.268	.620			.3554	.006
						학교규모 적정성	-.738	.248	-.520			-2.976	.015
보건 의료	.863	.745	.689	13.167	.002	상수	-24.392	13.098		-1.864	.095		
						순회방문 서비스	.622	.155	.685			4.002	.003
						치료실 운영	.350	.145	.414			2.419	.039
사회 복지	.700	.491	.440	9.628	.011	상수	16.481	6.510		2.532	.030		
						주1회 이상 재가서비스	.403	.130	.700			3.103	.011
응급 의료	.754	.568	.525	13.136	.005	상수	8.535	7.426		1.149	.277		
						소방차 5분 내 도착	.483	.133	.754			3.624	.005
문화 여가	.613	.375	.313	6.004	.034	상수	17.421	4.919		3.544	.005		
						읍·면 내 대출가능	.183	.075	.613			2.450	.034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중심으로 어촌지역 생활환경 실태를 살펴보고,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위한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적은 2012년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점검단위가 시·군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어촌과 같이 리단위로 분포하는 곳에 대한 실태는 사각지대로 놓이기 때문이다.

우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적 점검의 세부기준이 상이하여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어촌과 농어촌 전체와 비교한 결과 총 14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어촌이 농어촌전체 수준보다 양호한 여건을 보여 전반적 수준에서 어촌이 농촌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적은 2011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본 연구를 위한 조사시점이 2010년 이라는 점에서 어촌의 생활여건이 좀 더 개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소주거기준을 제외한 생활환경 여건에서 어촌은 상·하수도 설치 2개 부문에서 우수한 반면, 농촌은 도시가스와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2개 항목에서 우수한 환경이었다. 교통은 대중교통 및 보행자 안전체계 2개 측면에서 모두 어촌이 우수하였으나, 교육부문은 평생교육시설 1개 부문을 제외한 2개 영역에서 농어촌전체보다 열악하였다. 보건의료 부문은 시·군 내에서 기초의료서비스 가능, 월 1회 의료순회 방문 서비스 2개 영역에서 모두 어촌이 여건이 나왔다. 응급치안 부문은 비교 가능한 부문이 3개 영역이나, 방범용 CCTV 설치에 어촌이 농어촌전체 보다 우수하였으나, 구급차 30분 내 도착, 112 신고 시 5분 내 도착은 농어촌 전체보다 열악하였으나, 도서, 연육도서 등이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문화여가 부문은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부문이 어촌이 양호하였다.

부문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상태는 보건의료 75.4 > 주거 74.9 > 정보통신 72.9 > 교통 67.7 > 교육 57.1 > 사회복지 55.8 > 응급치안 52.3 > 문화여가 39.6의 순으로 분석되어 주거와 교통과 같은 공간개발 측면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낮은 상태로 분석되어,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한 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문별 개발 순위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부문이 1순위로 설문응답자의 56.1%가 답하여 객관적인 상태와 다소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이 주로 해당 사항 여부에 대한 것으로 평가되어 각 항목에 대한 질적

인 차원의 고려가 다소 미흡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부문별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항목을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교통과 정보통신 부문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교통의 경우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이미 확충되어 있고, 정보통신 부문은 어촌주민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만큼의 큰 요소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주거부문은 자녀별 각방보유, 샤워시설 구비여부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교육은 통학수단제공, 학교규모 적정성만이 부문별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는 등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별로 중요도가 상이하여 부문별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농어촌서비스 항목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적 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와 달리 주민평가에 기초한 조사결과로 평가방식의 상이함에서 오는 차이로 볼 수 있으나, 월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관람 정도를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한 공연 횟수와 전시일수로 분석하여 공급자 중심의 제공기회가 강조된 결과이다. 허나 문화여가 부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오직 읍·면 내 도서대출 가능여부라는 점에서 보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의 강조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농어촌서비스기준 측정방법인 30분 내 접근여부를 문화여가 부문의 경우, 시·군 내 문화시설이 운영되는가를 여부로 살펴보는 것은 생활권역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가령 문화여가 시설과 근접 거리에 있는 주민은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다소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주민은 시·군의 해당부문 평가가 높을 지라도, 주민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과 인접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주하는 시군에 해당시설이 없더라도 이용의 편리함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농어촌서비스 평가방식은 첫째, 각 부문별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명확히 설정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한 다분히 공급자 중심의 평가항목인 기회제공 정도가 아닌 접근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각 세부항목 측정기준이 주민평가에 기초하여 재설계되어야 한다. 우수고등학교와 같은 항목의 경우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학교유무로 판단하여 85.7% 인데 반해, 주민평가에 의한 우수고등학교 수준은 67.3%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시·군 내 읍·면이 속한 생활권역 단위로 점검단위가 변경되어야 한다. 생활권역으로 점검단위가 설정될 경우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군 주체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으나, 추후 생활권역을 중심으

로 한 행정구역 개편 등의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어촌서비스 평가방식은 주민 평가에 기초한 조사도 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전체 수준에서 정책적 활용과 검증의 편리함으로 통계에 기초한 방법은 중요하나, 이러한 방식이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수준과 괴리가 발생한다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른 정책적 방향과 지원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어촌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어촌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와 조사항목 중 어촌주민 생활에 관련이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어촌개발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어촌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 특히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개선방향을 위한 검토에서 농어촌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비교가 되어 단순 비교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이 2011년에 시행되어, 관련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곽행구, 김농오, 김지인, 2008,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2(2), 227-243.
2. 권삼문, 2000, 어촌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개발, 민속연구, 10, 73-90.
3.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대식, 이춘우, 2005, 부산시 어촌, 어항개발에 대한 인식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18-227.
5. 김성귀, 홍장원, 박상우, 2001,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김 준, 2006, 관광 콘텐츠로서 어촌의 문화자원 연구, 도서문화, 28, 347-378.
7. 농림수산식품부. 2012. 2.8일 보도자료 : 140개 시, 군 대상 농어촌공공서비스 수준점검 결과발표
8. 민흥기, 2009, 공간체계 변화에 따른 어촌지역사회 전망, 농어촌과 환경, 103, 39-51.
9. 박구원, 이수옥, 2002, 해안어촌관광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6(3), 167-190.
10. 박대식, 마상진, 신은정, 2006, 도시와 농촌의 삶의

-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신동주, 2011, 어촌관광 방문동기와 만족도, 관광연구, 26(3), 541-558.
12. 신영태, 최성애, 홍현표, 엄선희, 박상우, 김봉태, 2006, WTO/DDA 협상 이후 수산업, 어촌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 송미령, 김광선, 2009, 농촌서비스 기준도입 필요성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4), 1-18.
14. 송미령, 김광선, 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최성애, 박상우, 김봉태, 2009, 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어촌유형별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6. 최성애, 박상우, 김봉태, 2007, 어촌사회 양극화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 안영화, 노홍길, 김문관, 1988, 추라도 어촌종합개발의 기본방향과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9(1), 57-70.
18. 이승우, 박상우, 2010,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 이성근, 이관율, 2006,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공간 설정 :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행정학보, 19(2), 3-23.
21. 이재형, 2006, 소규모 어촌, 어항 개발을 통한 해양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0(2), 151-167.
22. 이창언, 2002,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사회문화적 영향, 비교민속학, 23, 411-441.
23. 임영규, 이수범, 이승곤, 2004, 국내 어촌관광 실태에 따른 개발방향의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18(2), 309-322.
24. 유기준, 1998, 어촌의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1(2), 297-311.
25. 유승동, 박현지, 박영술, 1999, 어촌지역 관광객의 관광동기, 사전기대, 사후만족, 재방문의사간의 관계분석, 여행학연구, 10, 123-139.
26. 장양례, 윤유식, 구분기, 2011, 어촌관광객의 선호속성, 어촌체험관광 만족도 및 체험관광 상품개발 지지도 : 추천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연구, 25(6), 341-363.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2009년도 식품수급표.
28.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관광어촌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9. DEFRA, 2002, Rural Services standard 2002, DEFRA.
30. DETREH, 2000, Our countryside: the future, DETREH.
31. The countryside Agency, 2002, Rural Service Standard, The countryside Agency.

접 수 일: (2012년 8월 14일)

수 정 일: (1차: 2012년 8월 21일, 2차: 9월 11일)

계재확정일: (2012년 9월 11일)

- 3인 익명 심사필